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군 추가 지정에…전남도 “난감하네”

신안군 등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 선정…국회 심의 과정에서 3곳 늘어
도의회 편성 양 군 지급 예산 4개월치에 불과…광역자치단체 부담 가중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곡성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 남도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전남도는 지난 주 끝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기존 사업대상지였던 신안군에 대한 지원분만 편성, 도의회 동의를 얻었는데 곡성군이 뒤늦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본소득 예산의 국비 지원율은 낮추고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는 안을 확정하면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대로라면 신안과 곡성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감안,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혜지역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2341억원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신안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곡성군 등 3개 지역이 늘어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혜지역이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주 열린 전남도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군에 지원해야하는 예산 129억원만을 편성해 증·감액 없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곡성군이 뒤늦게 추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남도는 신안군 주민수인 3만9800여명분에 도 부담 비율만 추산해 예산을 세웠으나, 곡성군민 2만8000여명이 추가된 것이다.

계다가 국회가 당초 국비 42%, 광역 18%, 시·군 40%였던 기본소득사업의 매칭비율을 국비 40%, 도 30%, 시·군 30%로 변경하면서 전남도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366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안대로라면 237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재정 완화 차원에서 도 지원비율이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현 상황대로라면 신안과 곡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은 4.2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통상 추가경정 예산이 2분기 이후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하향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전남의 농어민 기본소득은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최근 낮은 국비 지원율과 높은 광역 부담률을 이유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물론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이재명표’ 공약에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자. 해당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30%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있을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부담비율을 30%까지 상향한 것은 크나큰 부담이다”며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어가요” 지난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축제’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교육감이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내년초 출범 무산

전남도의회, 운영 예산 전액 삭감… 규약안도 상임위서 심사 보류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마저 상임위를 계류 중인 가운데, 광역연합의 내년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남도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전남도가 제출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광역연합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했다. 기행위는 광역연합 규약안이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비는 불필요하다며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있을 경우 예결위에서 되살릴 수 있는데, 이마저도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끝마쳐 예산 ‘부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기행위는 ‘전남도의 설명 부족’, ‘내실없는 속도 내기’ ‘광역 연합의 불필요성’, ‘광주와 동

(同)수의 광역의회 의원 수’ 등 각종 이유를 내세워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초 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을 계획했지만, 전남도의회가 규약안 심사 보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내년도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면서 연초 출범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국3특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모델로, 320만 시·도민의 공동 이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소멸 대응, 광주·전남 현안의 공동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설계됐지만 전남도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6년만에 인상

도의회, 89억원 증액 624억 확정…가구당 60만→70만원

6년 간 동결됐던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광주일보 11월 27일자 5면)이 인상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624억원원을 확정했다. 전남도 제출안인 535억원보다 89억원 인상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최근 6년간 60만원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예산 증액으로 지급액이 가구당 7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농수위는 당초 6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80만원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최종 70만원으로 결정했다.

김문수(민주·신안1) 농수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현실화에 대한 도의회의 요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농어업인 삶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신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TP원장 후보 “시의회 무리한 자료 요구 인권침해”

<테크노파크>

김범모 후보자, 인권위에 진정서
광주시의회 “법 따른 정당한 요구”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자료 제출 거부 이유를 ‘지명 철회’를 의결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시의회의 무리한 자료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광주시의회와 김범모 후보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주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시의회 특위가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무산을 선언하고 지명 철회를 공식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에

게 5년 치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구 자료에는 친구들에게 낸 경조사 사비나 지인들과 사적인 내역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국회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조차 후보자 본인의 5년 치 사생활 자료를 이토록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후보자는 시의회의 자료 요구 절차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특위 회의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 자료 요구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시의회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퇴할 뜻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필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어 당초 목록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관련 정보는 제외해 주는 등 위원회가 충분히 양보하고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넘어 지명 철회라는 강수를 둔 상황에서 후보자가 인권위 진정으로 맞서면서 임명권자인 장기정 시장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